

전주 객리단길, 안전한 보행로 생긴다

양방향 교통 일방통행화 인도 설치로 차량 사람 통행로 확보

최근 SNS와 입소문을 타고 관광 명소 급부상한 전주 객사길, 일명 '객리단길'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객리단길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도로를 일방통행화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등을 골자로 한 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객리단길이 한옥마을에 이은 관광 명소 명성을 얻으면서 급증하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고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기존 양방향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남은 공간은 인도를 설치해 보행자들의 통행공간을 충분히 확보 할 경우 전주한옥마을로 집중된 관광효과가 구도심과 영화의 거리, 객리단길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 같은 개선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객리단길 주변 지역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갖고 관찰경찰서와의 간담회 등 총 9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를 실시한 뒤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본격화할



전주시가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객리단길 주변 지역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계획이다. 유영문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일방통행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객리단길은 최근 2~3년 새 음식점과 카페, 공예점 등이 상점들이 늘면서 통행 차량과 불법 주정차도 늘어, 지난 2015년 1000여 건 미만 이었던 건수가 지난해에는 2100여건으로 급증했다.

이 늘면서 통행 차량과 불법 주정차도 늘어, 지난 2015년 1000여 건 미만 이었던 건수가 지난해에는 2100여건으로 급증했다. /송효철 기자

성매매업소가 냉면집으로

선미촌 성매매업소 사이에 일반음식점 개업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현장인 선미촌의 성매매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선미촌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선 것은 시가 이곳 성매매업소를 없애고 점진적으로 문화예술을 간직한 인권의 공간을 만들기 한 이후 처음이다. 선미촌 업종전환 1호 점인 이 냉면집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이용해 '예술촌냉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성매매업소 사이에 두고 일반음식점이 문을 연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향후 더욱 많은 업종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성매매집결지에 전국 최초로 현장시청을 운영 중이며 선미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녹지와 휴식공간 등을 갖춘 시터가든인 기역의 공간·인권의 공간이 설치되고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입혀 완전히 새로운 제 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센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업종전환을

통해 일반음식점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물주이자 영업주는 시가 추진해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신의 삶터에서 생애가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변화의 씨앗이 되고 싶은 바람에서 냉면집을 연 것으로 전해진다.

예술촌냉면집은 30년 전통의 구)삼천동도야합냉면의 비법을 가지고 불생면과 비빔냉면, 물만두를 주 메뉴로 하고 있는 가족기업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선미촌에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전환이 이뤄진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철거와 같은 전면개발이 아닌 예술의 힘을 앞세워 인권 침해라는 아픔의 장소를 시민 모두의 공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총 74억원을 투입해 서노송동 일대(11만㎡)의 골목경관 정비, 도로정비 커뮤니티공간 및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하는 문화재생 사업이다. /송효철 기자

폭염에 인명피해 속출... 전북에서만 5명 사망

폭염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읍에서 80대 노인인 이모(여)씨가 폭염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는 도내에서만 5번째 온열로 인한 사망자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이 밭에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이씨는 의식이 없었고 체온은 41도로 전해졌다.

이처럼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온열로 인한 환자는 총 173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사망했다.

도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 자주 마시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기증과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농생명연구원 홍보동영상 전국 공모전

공모기간 10월 12일까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총 500만원 파격 시상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김광원 부시장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동영상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민에게 농생명산업을 이끌어 가는 연구원의 사업 및 역할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모전 공식 이메일 계정(jm1000@jamire.kr)을 통해 출품 및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들은 약 1주일에 걸쳐

총 2차례의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7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시상식은 10월 19일이며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1편(100만원) 우수상 2편(각 5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연구원의 사업 및 역할 등을 참신한 아이템과 다양한 콘텐츠로 잘 녹여내길 바란다"며, "수상작은 연구원 홍보를 위해각종 행사, 전시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모전 관련 문의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063-711-1040) 홍보마케팅팀 김태중 연구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제동건다

전주시가 지난 10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현대해상빌딩 8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는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추세를 제동을 걸고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 팀장 21명은 부서별 징수실적 및 체납원인 등을 보고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체계를 갖춰 체납액을 감축 시키기로 했다.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자를 구분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에게는 주3회 이상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

기로 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81.4%를 차지하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회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을 중점 정리하기 위해 별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특별징수기간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소유재산 압류, 매각 등으로 체납 과태료를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재원이므로 담당팀장들이 술선수범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징수에 임해주시고 시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다가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서해안 고순대, 휴가철 법규위반 단속 지속 실시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남궁화태)에서는 지난 9일 야간, 도내 일제 읍주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휴가철 명소인 선운산 나들목, 대천 나들목 등 수시로 이동하며 실시하는 '스팟(spot) 단속' 형식으로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단속뿐 아니라, 경미한 사고도 사망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안전띠 미착

용 항목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했다.

휴가철 명소지 나들목에서의 지속적인 단속 효과 덕분에, 이날 단속에서는 음주운전자는 검거되지 않고 안전띠미착용과 같은 경미 교통위반건만 단속이 되었다. 단속의 최대 목적은 법규위반 예방에 있는 만큼, 서해안고순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